

◆ 政府 施策 ◆

## 공장 自動化用 기계 · 시설재 關稅減免 98년 폐지

- 10월 하순께부터 45%로...내년엔 40% 축소 -

工場자동화용 기계 · 시설재의 關稅減免率이 이달 하순께부터 50%에서 45%로 축소되고 내년 1월부터 40%로 줄어든다. 이어 오는 96년에는 30%, 97년에는 20%로 낮춰져 98년부터는 공장자동화용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財務部는 일부 수출입 통관제도개선과 함께 공장자동화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축소를 주골자로한 關稅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법제처에 조문심의를 의뢰했다.

이달 20일을 전후로 시행될 이 개정안은 공장자동화용 물품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재 50%에서 개정규칙 시행일부터 올 연말까지는 45%로 축소하고 내년 부터 40%로 더욱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96년, 97년에 감면율은 각각 10%씩 인하해 20%로 낮춘 다음 오는 98년부터 자동화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전면 폐지토록 豫示하고 있다.

공장자동화용품에 대한 이같은 관세감면 축소 · 폐지는 그러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자동화가 시급한 국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계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공장자동화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액은 지난 93년기준 연간 779억원으로 企業관세감면 총액 1868억원(협약감면 1670억원 별도)의 46.4%를 차지하는등 이미 축소 · 폐지가 예시된 尖端 · 防衛産業관세감면(93년 618억원)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업관세감면제도여서 업계에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재무부는 현재 감면대상 공장자동화물품(43개 품목)에 대한 고시의 유효일이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대상품목도 내년초부터 재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밖에도 △매분기마다 납부토록 하고 있는 보세구역 설영특허 수수료를 연 1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품을 보세창고에 장기간 장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관휴일 또는 시간외 통관시의 '시간외 특허수수료'를 사후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 ◇ 關稅減免 축소계획

(단위 : %)

주요 감면분야	현행	95년	96년	97년
△ 첨단방위산업감면	35	30	25	20
△ 공해방지	50	40	30	20
△ 선박·항공기항행용	50	40	30	20
▲ 공장자동화감면	50	40	30	20
	(10월후 45%)			

주 : ① △기존예시 ▲10월신규예시  
② 98년 이후 폐지

## 中企 관련법 대폭 整備

### — 商工部, 黨政회의 거쳐 최종안 확정 —

중소기업 관련법률이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시책과 판로확대에 초점을 맞춰 대폭 정비된다.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현재 8개로 다원화돼 있는 중소기업관련법을 기능별로 5개 법률로 통폐합해 최근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법률은 중소기업관련법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시책에 관한 현재 5개법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2개로 통합하고 산업조직시책과 관련한 3개법을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으로 개편된다.

상공부는 중소기업관련법의 통폐합과 함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등 양적기준 외에 독립하여 소유, 경영한다는 질적 개념을 도입하고 개방화·국제화 등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국제화 촉진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새로 제정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년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규정을 흡수하고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단순화, 체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판로, 물류, 환경문제 등과 관련한 지원시책을 대폭 보강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및 단체규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현대화, 중소기업제품의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제공, 공동상표 개발 및 해외판로 지원등의 규정을 신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시책을 강화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중소기업진흥법상의 창업지원관련 조항을 창업지원법으로 이관, 관련법률의 체계화를 꾀하고 창업절차간 소화를 위해 일괄의제처리 대상인 인허가 사항을 현행 38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된 중소기업근대화계획 승인제도, 과당경쟁 사업분야 지정에 관한 공표제도, 과당경쟁 조정제도,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지정제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시책 수립제도등을 폐지하고 긴급경영안정 지원계획의 수립 요건을 수출감소·수입증대에서 판매부진·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변경했다.

## 戰略물자 非해당 品目 大폭 擴大

— 商工部, 50개업체 2만880개 모델고시 10월 1일 시행 —

전략물자에 포함되면서도 수출허가절차가 면제되는 전략물자 비해당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상공자원부는 품목분류상 전략물자로 분류되지만 수출품목의 성능 및 규격이 전략물자수준에 미달돼 수출허가 여부의 확인절차가 면제되는 전략물자비해당품목으로 생산자기준 총 50개 업체의 2만880개 모델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략물자비해당품목으로 고시된 이들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전략물자 비해당판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허가대상 확인절차가 생략돼 수출절차가 대폭간소화된다.

상공부는 작년 10월 처음으로 전략물자수출허가제도를 실시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략물자중 성능 및 규격이 미달되는 비해당품목으로 24개 업체의 2630개 모델을 고시, 운영해왔으나 최근 국내 기업들의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신제품개발이 확대되면서 대상품목이 크게 늘어나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

또 지금까지는 전략물자비해당품목으로 고시된 경우에도 매 수출건마다 상공부에서 비해당판정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수출이 가능했으나 내달부터는 고시품목의 비해당판정서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 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이번에 고시된 비해당품목은 작년 고시된 품목에다 지난 1년동안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기술심사 후 비해당판정서를 발급한 품목으로 기계류가 14개 업체, 400개 모델이며 전자류가 36개 업체, 2만 480개 모델이다.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냉전시대 종식으로 COCOM체제가 해체되면서 올들어 통제대상국가가 크게 축소되고 대상품목도 크게 완화되고 있다.

특히 16개 통제국가중 폴란드·체코·슬로바크 등 3개국은 통제대상에서 완전 해제됐으며 반도체·CPU·반도체제조장비·컴퓨터 등의 통제가 완화되고 디스크드라이버·헤드디스크·입출력통제장치 등 컴퓨터보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생산장비 및 재료, 컴퓨터 컬러디스플레이장치가 통제해제된 바 있다.

## 工場설립·의무雇傭規制 완화 — 商工部, 27건 規制완화과제 확정발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설립완료 의무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또 공장건축물 주용도 바닥면적 합계의 50%미만으로 규제되고 있는 건축물 부속용도 비율이 폐지돼 공장내 창고등의 증축이 용이하게 된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서원우 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7건의 규제완화과제를 심의 의결하고 이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은 대부분 공장설립 및 의무고용과 관련된 규제들로서 우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기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승인계획을 얻은 경우의 공장설립완료 의무기간을 4년으로 연장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시 공작물가격을 인근 토지에 위치한 동일 또는 유사한 공작물 가격의 120%이내로 제한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토록 했다.

공장내 창고등의 증축을 어렵게 했던 건축물 부속용도 비율을 폐지토록 했으며 바닥면적 합계 2천 평방미터 이상 공장의 경우 주요구조를 내화구조로 설치토록 한 규제도 내와도료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고용부문에서는 건강진단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 사업주가 검진기관 및 시기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시 받아야 하는 전기기사협회 확인제도도 폐지, 업계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특례 보충역 연구요원이 해외출장시 받아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 제도를 폐지,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던 각종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동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접수된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규제완화, 건설중인 공장용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및 중과제 면제, 회사설립 등기 및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첨부 생략 등 기업애로 신고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개선조치를 상공부장관에 건의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완화 과제들은 현행 법령상의 경제행정규제를 전수검사해 1400여건의 규제를 발굴해 140여 기업 연구소 단체 행정기관 등에 배포, 개선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 '95 中企 財政支援 1. 2조로 擴大 — 商工部, 95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확정 —

정부는 내년도중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년보다 24% 늘어난 1조 278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을 올해보다 1100억원이 늘어난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보다 505억원과 500억원이 늘어난 1305억과 250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중소기업의 설비 및 운전자금에 사용될 금융자금으로 중소기업 전담은행자금 3조2천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등 총 24조원(잔액기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에 1조원의 자금을 조성,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약 3천여개 중소제조업체의 자동화사업을 지원하고 자동화사업에 필요한 기술제공 및 인력양성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 시화공단내에 대지 9천평, 건평 3837평규모의 자동화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95억원을 신규 조성하는 등 기술개발관련 재정자금도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36.3%가 증가한 776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95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상공부는 최근 중소기업이 전반적인 경기회복추세에 따라 생산과 조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으나 경공업부문의 일부업종을 중심으로 판매부진에 따른 부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제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국내외 환경속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제고가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아래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제고에 역점을 두고 이같은 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 자동화사업에 내년중 1조원을 지원하고 시화공단의 중진공내에 자동화센터를 설치, 국내외 자동화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및 보급활동을 펴나가기로했다. 또 자동화 담당인력의 국내외 연수를 위해 중진공의 자동화관련 연수를확대하는 한편 한·일간 자동화기술 인력 교류를 강화하고 작년부턴 시작된 자동화추진 5개년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제공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진공과 산업기술정보원의 중소기업정보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중소기업관련기관과의 정보망을 구축, 정보제공의 '원 스톱 서비스'를 구축키로 했다.

또 정보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정보전문 인력 양성, 정보화 진단지도사업 확충, 공동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공과대학의 연구인력 및 장비를 활용,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을 올해 40개에서 50개로 시도와 공동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중앙정부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異業種교류그룹을 올해 160개에서 내년에는 200개로 확대하고 이업종간 공동기술개발, 정보 및 노하우의 상호교류를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상공부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도 주력, 내년에는 공업기반기술의 사업화지원자금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등을 연계지원하는 신기술실용화지원사업을 새로이 도입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보유 특허 및 기술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양허와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도를 확충하는 한편 공업기술원 연구개발기술 이전을 위한 실험공장을 염색가공, 도금, 고무배합, 플라스틱사출성형 등 8개분야별로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기술지도사업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가 풀 제도를 본격 가동키로 하고 3만여명의 전현직 전문가를 등록,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문에 공동활용하는 한편 홈닥터식 기술지도, 국립공업기술원의 이동기술원 운영등 기술지도 방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간기술지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술지도사의 개인사무소제도를 도입하고 지도 업체에 대한 능력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내년중 서울 목동지역과 지방거점도시 2개지역에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전시장을 설치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2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간 연계 생산체제 구축으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아래 중진공내에 연계생산지원센터를 설치, 업체별 생산제품 설비 인력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는 한편 기업간 생산제품이나 임가공의 수·발주거래를 알선키로 했다.

상공부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방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내년중 2개 지역에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정보 기술판로 등의 애로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국 11개 지방공업기술원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지역단위 기술지원유관기관의 업무를 조직화하고 기술개발장비 및 정보의 공동이용을 추진한다.

또 개발이 낙후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3개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 지방중기육성자금으로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및 시설구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